

크레스트, SK 경영권 참여 공식화!

경영감시에 장기투자 병행 밝혀 ... 헤지펀드의 수익창출 도구화 우려

주식 매집을 통해 SK(주)의 제1주주로 올라선 크레스트 시큐리티스가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SK 관계자는 4월11일 "SK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유정준 전무가 크레스트 관계자를 만나 요구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크레스트 관계자가 이사 선임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경영감시인(watch dog)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만간 이사회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혀 크레스트의 경영참여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크레스트가 4월10일 SK 지분 12.39%를 확보했다고 공시한 이후에도 주식을 더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요 주주의 경영참여 차원에서 크레스트가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SK의 또 다른 관계자는 "크레스트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그린메일(Green Mail: 주식을 매집한 뒤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비싼 값으로 되파는 행위)이 아닌 장기투자(Long Term Fund)를 진행하겠다며 일정부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크레스트측이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주식 20.85%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SK사태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SK텔레콤의 주식 대량매집, 시민단체와 연대모색, 이사파견 등 경영참여, 경영간섭, 보유주식 재매각으로 1조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두고 한국을 떠난 타이거펀드 사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크레스트 시큐리티스의 모회사인 소버린자산운용의 제임스 피터 최고운용책임자가 4월10일부터 SK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유정준 전무와 만나 경영참여 문제를 협의했기 때문이다.

증시에서도 크레스트측에서 SK가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주식 20.85%를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전형적인 헤지펀드(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투기성 자금)였던 타이거펀드는 1992년부터 SK텔레콤 주식매집에 나서 1998년부터 경영간섭을 노골화했고, 당시 소액주주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와 연대해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의 선임을 관철시켰다.

또 1999년 SK텔레콤은 설비투자를 위해 30% 증자를 실시하려 했으나 타이거펀드는 주주가치 하락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고, 가처분 소송을 낸 타이거펀드는 참여연대와 함께 임시주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타이거펀드는 8월1일 SK텔레콤 주식 16만주(2%)를 2640억원에, 8월23일 79만1069주(9.5%)를 9849억원에 매각했다.

참여연대는 주총을 통해 손길승 회장 이사선임 반대, 액면분할 등을 계속 요구했으나 타이거펀드는 6000억원의 차익을 챙기고는 뒷전으로 몰려나 경영참여보다는 수익창출이 목적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후 타이거펀드는 1999년 말까지 3%정도 남았던 SK텔레콤 주식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다.

타이거펀드가 남긴 차익은 매매가 기준으로 7200억원 정도이나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 주식을 매집하던 1997년부터 1998년 초 환율이 달러당 평균 18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익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K그룹이 지분을 사들일 때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어서 막대한 환차익도 함께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SK 경영권 문제가 시장과 주주들에게 남겨져야 하며, 경영권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취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4월10일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는 장하성 교수가 SK의 최대 주주로 떠오른 소브린자산운용 관계자를 만났다고 밝힌데 이어 나온 발표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레스트증권의 SK 지분 매입과 관련 기업결합 및 경쟁제한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강철규 위원장은 4월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초청 간담회에서 영국계 투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의 움직임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대상은 주식취득이 기업결합에 이르느냐 하는 것과 기업결합에 해당하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느냐 여부로 현재는 주의깊게 관찰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총수가 순환출자를 통해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의 관건이며, 자회사간 순환출자가 차단된 수직적, 단선적 구도의 지주회사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mical Journal 2003/04/14>